

##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주도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차준호 원내총무(중)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6.2.25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법·재판소원제법·대법관증원안) 중 가장 먼저 추진한 법왜곡죄법이 26일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뒤이어 재판소원제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 사법 파괴 악법'이라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행방 방해)를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판사·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법왜곡죄법)을 재석 170명에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판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경우 조문의 추상성이 위한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에 따라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이에 법사위 원안 고수를 주장한 당내 강경파들을 '누더기법'이 됐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 법사위 심사를 주도한 추미애 의원(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의원(법사위원) 등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하며 사실상 기권했다.

법왜곡죄 도입 자체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민주당 광상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진보당 손승의원도 반대 표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진보당 전종덕·정혜경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법안에는 국가 기밀과 국가 첨단기술의 유출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점적 적용 대상은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법이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전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종결 동의 투표를 한 뒤 법안을 의결했다. 뒤이어 민주당의 또 다른 사법개혁법인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법원의 확정 판결 중 ▲ 현재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헌법·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원 재판의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한 차례 더 다룰 수 있게 하는 셈이다.

판·검사 법왜곡 최대 징역 10년... '원안수정 반발' 추미애·김용민 등 표결 불참

'도입 신중론' 광상언 반대 표결... 범여 정당서도 반대·기권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소원 대상' 헌재법 상정... 국힘, 다시 필리버스터

이때 재판소원 청구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구가 접수되면 헌재는 선고 전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날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재판소원제법에 대한 표결

은 법왜곡죄법과 같은 방식으로 27일 오후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남은 대법관증원안(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표결, 28일까지 사법개혁 3법의 국회 입법 절차를 완료한 단방치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민수 위원과 권익위원회 김바

울·신상욱 위원 추천안도 의결했다.

국민의힘 몫의 천영식 방미통위 위원 후보자의 추천안은 부결됐다.

민주당 일각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에선 보수 성향 매체 '퀵앤미이크' 대표인 천 후보자가 '국정농단'의 부역자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이재봉 기자

## 국힘 중진 의원들 "절윤·노선변화" 장동혁 "돌파구 마련 깊이 고민"

지방선거 어려움 인식 같이해... 최고위원·중진의원 회의 부활키로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26일 장동혁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과 부산·경남(PK) 일부 의원들이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노선 변화를 요구했다.

나머지 참석자들은 당내 노선 갈등의 핵심인 '절윤'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분열 극복이나 지선 준비 등에 관한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중진들은 지난 24일 회동에서 나온 '윤 어게인'과의 절연, 지방선거 패배 위기에 대한 의견 등을 전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고, 장 대표는 이를 만인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면담을 진행했다.

4선 이종배 의원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표는 중진 의원들이 얘기한 지방선거의 어려움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돌파구 마련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며 "대표와 중진 의원들이 갈등과 분열은 이제 종식하고 지방선거에 매진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중진의원들은 지방선거나 대역 투쟁 역할을 강화할 것과 앞으로 당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 개최를 요구했고,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며 "최고·중진회의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담에 배석한 최보훈 수석대변인은

"노선 변화란 용어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돌파구를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한 게 정확한 위당"이라고 부연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서울이 지역구인 5선 권영세 의원이 첫 발언자로 나서 "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잘못된 과거와 단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고, PK가 지역구인 조경태·김도읍·박대출 의원이 비슷한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는 "분열하지 말고 뭉쳐야 한다"거나 "대역 투쟁을 강화할 때", "공천을 잘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주로 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중진 의원들 의견이 통일된 게 아니라 각자 여러 의견이 있지만, 분열을 봉합하고 지방선거에 매진하자는 부분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당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에게 '윤석열과 절연하자고 하는 세력과 절연하겠다'는 발언을 철회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절연을 통해 국민에게 다시 사랑받도록 하자고 했다"며 "이에 장 대표는 '심사숙고하겠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답했다"

고 전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당이 더는 분열돼선 안 된다는 명제로 '각자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잘못을 고백하고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자', '국민께 속죄하는 세리머니를 보여드린 다음 빨리 선거 체제로 돌입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월외 당협위원장들의 (당 윤리위) 제도도 분열이니 대승적으로 풀어주고 새롭게 나아가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4선 이현승 의원은 면담 이후 페이스 북에 "12:3 비상계엄이라는 참사를 사전에 알지도, 막지도 못했고 이후 제대로 수습도 못했다"며 "중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련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하며 고개 숙여 사죄 드린다"고 적었다.

2시간가량 진행된 면담에는 당내 4선 이상 중진 19명 중 조경태·주호영·권영세·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 의원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한편 재선 의원들도 국회에서 별도 모임을 하고 '의총을 통해 끝장토론을 해서 빨리 당의 노선과 여러 현안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나아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임태영 의원이 전했다.

모임엔 30명 중 11명이 참석하고 10명이 위임 의사를 밝혔다.

이재봉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연속으로 시민경로

# 서울시민 결연

# 서울특별시의회

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에도 시민들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제334회 임시회 2026. 2. 24. ~ 3. 13. (18일간)